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65
----------	------

발의연월일 : 2024. 9. 3.

발 의 자 : 조은희 · 서범수 · 이인선
고동진 · 김기현 · 김소희
최수진 · 박정하 · 주진우
김상욱 · 한지아 · 이달희
김용태 · 박준태 · 곽규택
이만희 · 김미애 · 신정훈
유상범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 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실제로 작년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의자 4명 중 3명(75.8%)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기술 발달이 범죄의 저연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경고등이 켜지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서는 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 특례를 허

용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및 제50조제1항제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제14조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
항 외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로, “제25조의2”는 “제14조의4”로 본다.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4조의4(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u></p> <p><u>②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u></p>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제14조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로, “제25조의2”는 “제14조의4”로 본다.

제50조(벌칙) ① -----

<p>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신 설></u></p> <p>1. · 2.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p> <p>-----</p> <p>ㄱ.</p> <p>1.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p> <p>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